

제3장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 기초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제2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제3절 통일정책 추진방향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의 배경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를 존중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이 더욱 실질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실리추구와 경제력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는 근 반세기 동안 북한체제를 이끌어 왔던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심화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권력승계 등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새롭게 점검 보완하고 보다 자신감 있게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통일의 기본철학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원칙,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제시하여 통일방안에 관한 대강을 일목요연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제시하였던 통일방안들을 종합검토하

고,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국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일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게 되었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가. 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동안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두 가지 중심개념을 분명히 정립하였다. 즉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이 ‘자유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접근방도가 ‘민족공동체’임을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철학은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가 자유와 민주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향한 접근방도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민족공동체를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즉,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정치적 통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접근방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란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

라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리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평화’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요 염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 희생을 초래할 무력이나 폭력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한 뒤에도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민주’라는 개념에는 우리민족 개개인 모두에게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고루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다. 통일의 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초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Rightarrow ’ ‘남북연합단계’ ‘ \Rightarrow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제2단계의 ‘남북연합’은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한 간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남북연합에서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위한 법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외형의 통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의 분단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라. 통일국가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국가는 통일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장 및 복지와 인권존중이 설정되고 있는바,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곧 민족전체의 복리가 구현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통일된 조국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여러가지 병리적 현상이 제거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는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민족구성원 모두가 성숙한 선진시민이 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세계속의 중심국가이다.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및 특징

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정립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세계사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사 발전의 일관된 맥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과거 동서 진영간 이념적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정신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세계사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지향해 왔던 가치도 다름아닌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기본질서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앞으로 우리민족이 세계사의 주류에 동참하여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는 당위성은 바로 이와 같은 근거에서 연유한다.

나. 통일의 주체가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강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제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 위에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생존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마땅히 민족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될 수 없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다.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민족공동체 강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한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민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 집단 또는 계급의 국가권력 장악 과정이나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으로 보기 보다는 한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를 더욱 중시함으로써,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정보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민족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어 갈 때 1민족 1국가의 단일 민족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개념인 민족공동체에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이 내포되어 있다. 남북한간에 분야별 민족공동생활권 형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통일국가의 구체적 미래상 제시

인류보편의 가치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고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이다.

따라서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회복 발전시키려고 하는 민족공동체는 다름아닌 민족 전체의 번영을 약속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번영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름아닌 민주주의여야 한다.

통일은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면서 민족의 창 의와 능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한국사회부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높아진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적극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남북관계 진전과 성취를 위한 실천적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을 분단으로 귀결된 ‘미완의 광복’을 극복하여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통일국가는 민주와 번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가, 정신적 가치와 도

덕성이 존중되는 문화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세계에 우뚝 선 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자는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둘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였다.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협력’이 요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을, 북한의 ‘고립’이 아니라 ‘국제사회 참여 지원’을, ‘일방적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합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우리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였다. 남북한이 이미 기본합의서 및 각종 합의문건을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측의 약속위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남북이 합의한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넷째, 남북간 평화와 협력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4자회담의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며,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긴장완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감상적 통일론이나 일방적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대비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아울러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식량난은 일시적 지원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 협력을 강

조하였다. 둘째,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남북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환기시켰다. 이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대북 경제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자세변화가 있는 경우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넷째,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자원의 합리적 배분문제 제기 등 북한의 변화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동포를 적극적으로 돕되, 북한당국에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입장의 표현이다.

제3절 통일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통일이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민족 전체의 삶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에는 불신과 대결의 두터운 장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가운데 식량난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인 대남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의 기본원칙과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대남 교란책동과 안보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하였으며, 경수로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왔다. 남북관계개선과 인도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인모의 방북을 허가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제의하였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감으로 인해 폐쇄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핵개발 의혹을 야기시켜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간 협력의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비록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만 주요한 계기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정부는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추구하는 때에 부각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자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에 배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국제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간 접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남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남북당사자가 신뢰를 가지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용이한 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하도록 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대결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단호히 대처하여 이의 포기를 유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양면성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대응은 상호 보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와 협력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